

‘라임·옵티머스’ 정국 뇌관 급부상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회장 옥중 폭로 여 “檢, 공작 수사 단죄해야” 야 “법무부가 수사 방해” 공수처 가동 vs 특검 도입 충돌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을 뒤흔들며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수 있는 양상이다. 여권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부각시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정 조준하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로비’를 폭로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서신을 계기로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연 대표는 이날 최고 위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10월 26일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 시한을 부각하는 등 공수처 법 개정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일부에선 ‘김봉현 폭로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장악되다시피한 검찰이 다수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를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할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공수처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뜻밖이었다며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공간을 축 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 불상의 검사와 변호사를 각각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하는 검사와 변호사가 나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피해자”라며 “검찰이 사건의 진위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재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애 장관,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 지휘

지휘라인 배제, 윤 총장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

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의 ‘뭉툭’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여론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철저히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체내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중민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에 보성출신 정양석 전 의원

국민의힘 김종민 비대위원장이 새 사무총장에 정양석(61) 전 의원을 선임했다. 정 사무총장은 서울의 대표적 혐지인 강북구 갑에서 18대, 20대 의원을 지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총선백서 집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 사무총장은 김선동 전 사무총장 사퇴로 공석이 된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맡는다. 정 사무총장은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84년 민정당 공채로 정치에 뛰어들어 주요 당직을 거쳤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광주 中企 정책자금 지원을 5년 연속 최하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광주 지역 지원율이 5년 연속 최하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광주지역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6조 1029억원 중 3.3%에 불과한 8682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광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비중은 2015년 3.3%, 2016년 3.6%,

2017년 3.3%, 2018년 3.2%, 2019년 3.4%를 기록하며 5년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지원으로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광주지역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6조 1029억원 중 3.3%에 불과한 8682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광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비중은 2015년 3.3%, 2016년 3.6%, 2017년 3.3%, 2018년 3.2%, 2019년 3.4%를 기록하며 5년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지원으로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광주지역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6조 1029억원 중 3.3%에 불과한 8682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광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비중은 2015년 3.3%, 2016년 3.6%,

김희재 “외국인 국내 주택 구입 통계 구축 시급”

부동산 규제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는 제대로 구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김봉현, 167일간 66회 검사실 소환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폭로한 검사실에서의 소환조사 내역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7일간 총 66회 검사실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24주 동안 주당 약 2.8회 꼴인 셈이며 김 전 회장이 폭로한 ‘3주 정도의 소환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이 안착되기 전이라도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부분별 소환조사나 별건 수사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中企 직접대출 사고채권 6년간 2조 4272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사고채권 매년 급증해 6년간 2조 427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대출 연도별 사고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사고채권 금액은 3411억원,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 2019년 518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 기준 27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출자산 부실이 계속 심화될 경우, 부채중가 및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것이 뻔한 이른바 ‘좀비기업’과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여 자금 융통에 숨통을 터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분명 그 성격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